다산포럼

역사는 미래의 사안이다

김 재 인
철학자·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서양 근대는 인류에게 소중한 여러 가치를 일깨우고 또 성취했다. 자유·평등·유대 등 기본 권리의 쟁취, 민주 공화정이라는 정치 체제를 지향한 혁명, 과학적 사고를 통해 이룩한 기술 문명 건설 등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그 바탕에 짙은 부정적 그림자가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식민주의, 시장 만능 자본주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를 꼽을 수 있다. 이것들이 서양 근대를 떠받치고 있는 공리의 집합, 즉 공리계다.

그런데 이 공리들은 서양 근대의 성취와 가치라는 빛의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다. 그것들은 그림자를 은폐하는 빛이었다. 이 점에서 그것들을 비판적으로 재고하고, 지금 시대에 어떤 것들을 되살려야 하는지 실험해야 한다. 서양 근대를 넘어 지구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새로운 탈근대 가치 시스템이 절박하다. 이는 식민주의로부터의 원상복귀를 지향하는 탈식민주의, 시장과 원자적 개인을 넘어 인류가 공동으로 누려야 할 마땅한 몫의 회복 같은 주제로 이어져야 한다.

그중 식민주의 문제를 들여다보자. 손쉽게 '역사보다 미래'를 말하는 이들이 있다. 한국 수구세력이 내세우는 프레임이기도 하다. 이들은 역사 청산 문제를 한일 관계로 좁힌다. 하지만 자칭 진보 세력도 문제의 범위를 오해해서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진보 담론도 좁은 시야에 갇힌 셈이다. 역사 청산 문제는 200년 넘게 이어져 온 식민주의의 관점에 도전하는 탈근대 담론의 핵심이다. 식민주의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일 관계 문제라고 축소하면 안 된다.

식견이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이 문제를 국가 단위에서 이토록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다른 사례는 없다. 식민지 경험을 딛고도 오늘날 이 정도 힘을 갖춘 나라가 한국밖에 없기 때문이리라. 한국이 역사 청산을 계속 외칠 수 있다는 건 정의의 관점에서 자랑스러운 일이다. 우선 국력의 징표이기 때문이며, 또한 과거 식민지배를 당했던 모든 지역을 대표해 외치는 진보의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힘이 없거나 자신이 없어서 외칠 수 없는 자들에게 힘을 주고 자신감을 주는 행위는 퇴행적이라고 비판받을 문제가 아니다.

한 걸음 더 가 보자. 서양 근대 사상은 식민주의에서 자유롭지 않다. 거듭 강조해야 할 문제인데, 과거에도 오늘에도 식민주의를 반성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이를 실천하는 서양 사상가나 정치인은 별로 없다. 프란츠 파농처럼 식민지 경험을 한 사상가의 목소리만 드물게 확인된다. 현재의 부강이 과거 식민 지배의 결실임을 모르는 이 없건만, 저들은 뻔뻔하게도 자유와 인권과 평화를 외친다. 걸핏하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시장이 합리적으로 결정하니 모든 걸 시장에 맡기자는 논리도 현재의 세계 질서를 낳은 식민주의를 은폐한다. 시장 논리는 힘을 통해 이미 판을 장악한 자들이 내세우는 가짜 공정성 주장이다.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이후에, 공정한 경쟁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부강의 질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편성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미 달라진 체급 아래 경쟁은 무의미하다.

역사 청산을 부정하는 목소리는 현재의 지배자한테서 나온다. 현재의 지배자는 과거를 지배함으로써 미래를 지배하려 한다. 역사 청산은 식민주의 청산이며, 근대 가치의 전환이며, 지금 여기의 힘 대결이다. 미래를 위한 투쟁은 항상 과거를 소재로 벌어졌다.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미래를 장악한다.

철학은 가치를 다루고, 가치 창조를 말한다. 서양 근대의 가치 목록을 문제 삼지 않고서, 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다. 패권자의 논리가 정당성 담론조차 뭉개고 가는 마당에는 더욱 그러하다.

청춘톡톡

불공평의 메커니즘

안 창 완
조선대 생명화학고분자공학과 3년

불공평이란 무엇일까? 보통 '사회적 불공평'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사회는 항상 불공평과 싸운다. 기득권, 즉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를 입는 사람들 또한 생기니 말이다. 제로섬 게임이 그렇다. 제로섬이란 어떤 시스템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이 일정해 한쪽이 득을 보면 반드시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는 상태를 말한다. 즉 승자 독식의 제로섬에서의 공평이란 있을 수 없다.

불공평이 생기는 메커니즘에는 '박탈감'이 있다. 15~17세기 군주주의가 절정을 달했을 때 평민은 귀족과 생활상의 차이가 극심했음에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혁명을 일으켜야겠다는 의식조차 없었다. 오히려 혁명이 일어난 시점은 2차 산업이 도래하며 중산층의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었을 때 발발했다. 이는 중산층이 자신들은 귀족과 크게 다름이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비등한 관계일 때 불공평에 대한 의식이 떠오르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보면 불공평을 이처럼 이분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하지만 복잡한 사회에서 이분론으로 나눌 수 없는 불공평 역시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감정의 불공평이다. 감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과연 공평한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사랑, 혹은 사랑하는 이에게로부터 주거나 받는 사랑 말이다. 흔히 아가페적 사랑을 가장 크고 불공평한 사랑으로 본다. 이는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건네는 사랑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랑을 주는 당사자가 느끼는 감정에서 행복감, 만족감적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도 과연 불공평하다고 볼 수 있는가?

주는 사랑의 기쁨을 생각한다면 사랑을 주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기쁨은 받은 사람의 기쁨만큼이나 크다. 그런 의미에서 유일하게 공평한 것은 사랑의 감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공평을 외치는 사례가 다양하다. 관계의 공평, 기회의 공평 등 다양한 사례 속에서 동등함을 위해 싸운다. 언제부턴가 공평이란 개념은 무를 썰 듯 딱 자를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름을 뜻하는 공평에는 이제 단 일부분도 손해 보지 않겠다는 의식이 담기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을 공평이라할 수 있을까. 인터넷에서 공평과 평등에 대한 의미를 시각화한 그림을 본 적이 있다. 공평은 어떠한 조건과 환경이라도 모두가 같은 높이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반면 평등은 조건과 환경을 똑같이 제공하지만 애초부터 서로 다른 위치에 있기에 같은 환경을 제공해도 전부 다른 높이에서 바라보게 된다. 이러한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가 외치는 것은 과연 공평일까. 평등일까.

사회에서 각자의 공평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점점 만연해져 가는 것은 사회가 점점 감성보다는 이성을 추구함에 있다고 본다. '내가 더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남들은 이만큼 하는데 나도 그만큼은 해야 해서'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공평하기 위해 애쓴다.

하지만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진 사회에서는 숫자로 나누기하듯 모든 개념을 이분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공평은 평등과 달리 서로 다른 부분을 인정하고 포용해야만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알고 감정과 이성을 잘 배합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불공평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평을 위한 제도적 개편만을 외쳐서는 안된다. 가장 먼저 '감성과 이성이 공존할 수 있는 인식'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기 고

새 정부에 바라는 방역 정책

박 형 철
전 국립소록도병원장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대를 갖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 정부를 지지했든지 그러지 않았든지 간에 차이는 있겠지만 기대를 품는다는 점을 숨길 수 없다. 그 기대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에서 일부 엿볼 수 있었다. 엊그제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는 문재인 정부보다 열 개 많은 110개였다. 담을 내용이 많아서, 일을 전 정부보다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혀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언론 보도를 통해 내용을 대략 파악했다. 대부분 일이 그러하듯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가 혼재해 있었다.

모든 분야를 평가하기엔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고 보건의료 분야만 놓고 고민하기로 하였다. 코로나19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기에 감염병 항목이 눈에 들어왔다. '감염병 대응 체계 고도화'란 제목이었다. 대응 체계 개편, 재유행 대비, 이상 반응 국가 책임, 새로운 팬데믹 대비 방역 체계 선진화, 감염병 위기 대응 의료 체계 개편 등을 소제목으로 각각에 부연 설명이 곁들여졌다. 새롭게 와 닿는 부분을 크게 없었다. 전부터 언론에 노출되었고 인수위 누리집에서도 종종 보았던 그렇고 그런 것으로 느껴졌다. 좀 더 눈을 위로 올려 큰 제목을 보았더니 '국민께 드리는 약속 01'항목 중 두 번째였다. 중요성을 시사한 걸로 판단되어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한데 막상 살펴보니 항목의 제목이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였다. 그들은 감염병 대응 체계 고도화를 공정과 상식으로 보았던 걸까?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 체계는 멀리 콜레라나 장티푸스 등 수인성 질환을 기반으로 하는 방역 체계부터 2000년 전후 호흡기 감염병 특히 메르스 대응 실패를 밑바탕으로 다듬어진 수정 보완 체계다. 수많은 시민들과 보건의료 종사자의 노고의 산물이다. 정파에 따라 몇 가지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고, 혹자는 정치 방역(?)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방역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에, 온전히 K-방역이 정치 방역이란 주장에는 동의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도 공정과 상식이란 정치의 영역에 두는 오류를 범했다. 공정에 내포된 긍정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정파 간에 다툼이 있어 더욱 그렇다. 많이 낯설어 보였다. 앞으로 이 범주에 들지 않는 감염병 팬데믹에는 정부가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일까 의문이 들었다.

감염병은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일상과 연결되고 국민의 건강권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러기에 공정과 상식의 수준에서 해결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공정의 잣대로 접근하다 보면 의과학 본류를 놓치고 역으로 정치의 영역에 방역을 두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감염병은 그 자체로 문제이지만, 넓게는 시민 건강 즉 보건의료 문제로 확대하여 접근해야 한다. 코로나19에 모든 시민들이 감수성을 가지지만 감염 여부와 질병의 과정 및 결과는 감염자의 연령·성, 사회경제적 상태와 흡연·음주 등 건강 생활 습관은 물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여부와도 밀접히 관련된다. 코로나가 다소 소강 상태인 지금은 시민들 스스로 또는 지역 사회의 도움을 받아 건강 가꾸기에 전념해야 한다. 이런 보건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는 일이 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다. 정부는 평소 시민들의 건강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끌어 올리려는 노력을 방임하면 안된다. 국가의 행정력과 재정을 투입하고 공공보건 의료기관을 확충하거나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빌려 그런 노력에 적극 도움을 줘야 한다. 그러한 정부의 노력을 국정과제에 담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전통적으로 보수 정부는 공공의 영역보다 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이 정부도 누차 이런 방향을 강조해왔다는 점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공공으로 하든 민간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하든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비용이고 그게 동인이다. 충분한 예산 투입을 통해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일이 주요한 이유다. 그러기에 정부의 정책 의지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재정 투입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실행이다.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 등을 통해서라도 방역에 민간 의료기관들의 공공성을 묶어두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보건 실패의 사례로 남을 것이다.

만약 전 정부가 실패했다고 하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전 정부가 감염병을 정치 영역에 두는 것이 못마땅했다면 새 정부는 비정치의 범주로, 순수한 의과학의 영역으로 묶어 두어야 한다. 그런다면 관련 전문가들이나 시민들로부터 더 큰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社 說

윤석열 정부 출범…통합과 균형의 정치를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공식 취임한다. 국가원수로서 법적인 권한이자 역할인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넘겨받은 윤 대통령은 이날 0시 용산 대통령실 '지하 벙커'에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으며 집무를 시작한다. 이어 오전 11시 국회 앞마당에서 열리는 취임식에서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내걸었다. 국가 경쟁력 회복과 민생에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는 다짐으로 읽힌다. 이러한 약속대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의 삶이 나아지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5년이 되기를 염원한다.

새 정부가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당장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늦어지면서 '반쪽 내각' 출범이 불가피하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인사 검증 국면에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에 발목이 잡혀 경기 침체에다 물가 급등까지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에서 48.56%의 득표율로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당선됐고, 이후 지지율은 그보다 더 낮은 상황이다. 또한 집권당의 의석은 109석에 불과한 여소야대 국면이다. 이 같은 핸디캡을 안고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제대로 이끌고 가려면 국민 통합과 야당과의 협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데 당선 후 지금까지 보여준 통치 방식은 이와는 거리가 있다. 인사는 능력주의를 명분으로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에 치우쳤고, 정책에서도 광주·전남 등 낙후 지역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의 순항과 성공을 바라는 국민의 마음은 한결같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 첫 일성으로 통합과 협치를 강조한 바 있다. 다시 초심을 되새겨 보다 폭넓게 소통하면서 균형의 정치를 펼쳐야 할 것이다.

5·18 실체적 진실 규명 위한 제보 이어지길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또 한 명의 계엄군이 양심 고백을 하고 나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5·18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수원에 사는 A(69)씨가 광주항쟁 진압 장면을 촬영한 사진에 등장하는 계엄군이 자신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1980년 5월 당시 7공수여단 33대대 9중대(일명 번개 중대) 소속 화기 하사로 광주에 투입됐다"고 회고했다. 그가 지목한 사진은 트럭 적재함에서 계엄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시민이 양복을 입은 채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다. '공수부대의 만행이 얼마나 잔혹했으면 외마디 저항도 못한 채 저렇게 당했을까…'라는 탄식을 부르는 5월의 대표적인 사진 가운데 한 장이다.

그는 "무릎 꿇고 있는 시민을 직접 찾아 뵙고 사죄하고 싶다"며 조사위에 연락했다고 한다. 조사위는 지난 6일 A씨에 대해 대면 조사를 벌이려 했으나 지병을 앓던 A씨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미뤄졌다.

A씨의 고백이 반가운 것은 계엄군의 활동상 등 5월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광주일보가 2017년 특종 보도한 공수특전여단 신순용 전 소령은 옛 광주교도소 앞에서 시민군 세 명을 사살해 직접 암매장했다고 고백해 학살 진상 규명에 크게 기여했다. 11공수 특전여단 이모 중위도 도청 앞 집단 발포 과정에서 현장 지휘관들이 지휘부에 발포권 하달을 촉구했다고 증언, '자위권' 성격의 발포였다는 신군부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폭로했다.

이들의 증언이 아니었다면 5월의 진실은 미궁에 빠졌을지도 모른다. 발포 명령자와 암매장, 행방 불명 등 5월의 핵심 의혹이 규명될 수 있도록 계엄군과 목격자 등의 증언과 고백이 잇따르길 바란다.

無 等 鼓

누더기 공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전남 지역 공천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공천을 바라보는 지역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의 미래를 이끌 후보 공천을 둘러싸고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천 결과에 대한 깨끗한 승복보다는 강한 반발과 재심 신청은 물론 무소속 출마도 줄을 잇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축제가 돼야 할 지방선거가 불공정하고 혼탁한 경쟁의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는 셈이다.

그 원인으로는 불투명한 공천 관리가 꼽히고 있다. 좀 더 들여다보면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자기 사람 심기에 나서면서 경선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이다. 특히 전남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은 고무줄 공천 잣대로 '요지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덜한 광역·기초의원 공천은 폐해가 더 심한 상황이다. 외부 인사들이 참여한 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조차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들러리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은 '누더기 공천' 비판에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계산은 간단하다. 비판 여론은 잠시에 불과하고 풀뿌리 조직을 챙기는 것이 남는 장사라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선 패배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혁신 공천'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역대급 '공천 참사'에 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지역의 현실도 들여다보지 못하는 민주당이 과연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비판할 수 있는 자격과 역량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퇴행은 바로잡지 않으면 반복된다. 경쟁과 견제가 없는 민주당 독점 구도에선 더욱 그렇다. 결국, 깨어있는 시민 의식으로 적극적인 투표에 나서는 것이 답이다. 반칙으로 공천 티켓을 얻은 후보와 이를 설계한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강고한 연대를 통해 민심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지역의 미래가 바로 선다.

/임동욱 이사 겸 선임기자 tu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